

“정상계도 진입”은 참말이 아니다

관련 기사 2, 3, 4, 5, 12면



재보선 이후

자본가 정치인들의
양당 모두 딜레마

3면

20대 남성,
안티 페미니즘인가?

4면

위안부 배상 파소의 의미

한국 지배계급도
피해자들을 외면한다

12면

경제 회복?

“정상계도 진입”
아니다

5면

문재인 정부와
세월호 운동 지도자들

2면

마국의 쇠퇴 속에
불안정해지는 세계 질서

6~7, 8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칼럼

신자유주의 하에서도
여전한 국가와 자본의 유착

9면

끝나지 않은 ‘4월’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문제 해결에 여전히 진정성 없다

김승주

세월호 참사 7주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사의 교훈을 되새기고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주류 정당과 정치인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일제히 추모 메시지를 내놨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바뀐 것은 거의 없다. 세월호 참사 이후 7년 중에 4년이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이었는데 말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뻔뻔하게 노란 리본을 달고 4월 16일 안산 추모식에 참석했다. 당대표이자 세월호 막말 정치인 중 하나인 주호영은 이날 유가족들 앞에 서서 “쇄신”을 약속하고 위로하는 척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뒤돌아서 한 일은 연일 박근혜(와 이명박) 사면론을 쏟아 낸 것이다. 4·7 재보선에서 당선한 오세훈과 박형준이 앞장섰다. 선거 이후 우파의 기세가 오른 것이다.

유가족 분노 부른 사건

이렇게 세월호 참사 적폐들이 날뛰는데, 적폐 청산을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는 뭘 했나?

4월 23일 청와대는 “세월호 특검”을 임명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이 특검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요청한 지 7개월, 국회를 통과한 지 4개월이나 지난 늑장 임명이었다. 게다가 이 특검은 CCTV 저장 장치 의혹에 협소하게 한정해 60일 동안만 수사하는 특검이다.

반면에 구조 책임자 수사에 관한 특검안은 19대, 20대 국회(농해수위)에서 질질 끌다가 임기 만료로 번번이 폐기된 바 있다.

4월 11일에는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다. 이날은 해양수산부, 해경, 416재단이 함께 준비한 7주기 선상 추모식이 예정돼 있었다. 유가족들은 해경이 제 공한 배를 타고 참사 이후 처음으로 사고 해역까지 이동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행사 당일 해경이 끌고 온 배는 어처구니없게도 세월호가 다 침몰하고서야 현장에 도착해 구조 실패의

상징이 된 경비정 3009함이었다. 유가족들에게 트라우마를 일으킬 수 있는 배를 준비한 것이다.

분노한 유가족들은 탑승을 거부했다. 결국 4월 11일 행사는 취소(연기)됐고, 해경은 사과했다. 그러나 서해해경청 홍보계장은 갈잡은 변명을 했다. “[3009함이 아닌] 3015함으로 세월호 행사 지원을 하면 예산 지출과 해상주권 수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

3009함이 어떤 배인지 관심도 없었거나, 알았어도 예산을 아끼고 중국 어선 단속 따위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세월호 참사 당시 큰 배나 헬기가 곧바로 출동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했다.

단순 해프닝으로 치부할 일은 아니다. 정부가 집권 전에 약속한 대로 세월호 참사 적폐를 철저하게 청산하고 책임자들을 엄정 처벌했다면 이런 냉담하고 무신경한 일이 벌어졌겠는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 내내 유가족을 말로만 위하며 사실상 기만했다. 해경, 해수부 등 국가 기구 곳곳에 남아 있는 참사 책임자들도 고위직에 임명해 면죄해 줬다.

배신

올해 1월에는 검찰 특수단의 세월호 재수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유가족이 처벌해 달라고 요구한 78명(황교안 포함) 대부분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불구속 기소된 해경 지휘부 10명도 얼마 지나지 않아 무죄·집행유예를 받았다.

문재인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졸속 수사하고 책임자들에게 대거 면죄부를 준 적폐 검사 이성운(당시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혔고, 그는 지금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런 일련의 상황 때문에 참사 7주기 기간에 유가족 사이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정나미가 완전히 떨어진다’, ‘대통령에게 희망을 걸었던 스스로가 원망스럽다’, ‘세월호 사건 진상 규명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진상 규명을 회피하는 이유부터 조사해야 할 지경이다’ 하고 분노가 일어났다.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가” 지난해 10월 26일 청와대 앞에 선 유가족들과 지지자들

문재인 정부 위선 속에 4년이 흘렀다 4월 11일 선상 추모식에 정부는 구조 실패의 상징 3009함을 준비했다. 유가족들은 분노하며 승선을 거부했다

정부에 도전 않는 주요 시민단체 지도자들

일부 유가족은 정부(해수부·해경)뿐 아니라 정부와 함께 선상 추모식을 준비한 416재단에 대해서도 비판과 불만의 뜻을 내비쳤다. 행사 조율을 맡은 416재단은 행사 당일 3009함을 먼저 나서서 거부하지 않은 듯하다.

416재단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정부지원재단이다. 이 재단, 그리고 그와 밀접한 관계인 416연대의 주도적 리더들은 온건한 엔지오 활동가들이다. 416재단 운영위원장이자 인권재단 사람 소장인 박래군 씨가 그들의 리더 격이다. 온건파 지도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미적대는 동안, 정부에 맞서 제대로 항의를 건설한 적이 없다.

단적인 예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청와대 직속의 진상 규명 위원회를 약속했지만, 집권 후 손바닥 뒤집듯 국회에 공을 떠넘겼다. 결국 국회는 2기 특조위(사참위)를 박근혜 정부 때의 1기 특조위와 마찬가지로 허약한 조사기구로 만들었다. 그런데 416연대, 416재단의 시민단체 리더들은 전임 정부 때와 달리 현 정부를 정면 비판하지 않았다.

2019년에는 416연대 평회원들 사이에서 문재인 정부와 416연대 지도부를 비판하는 ‘사발통문’이 돌자, 416연대 지도부(당시 공동대표 박래군 씨)는 “416연대를 궁지로 모

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만으로도, 사실상 정부를 감싼 것이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세월호 운동의 일부였고 “거리의 변호사”라 불리던 박주민 의원(민주당)은 또 다른 예다. 박주민은 세월호 유가족의 기대를 받으며 2016년 5월 국회의원이 됐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박주민은 세월호 약속을 배반하는 민주당/정부에 대한 내부 비판자 구실을 전혀 하지 않는다.

이처럼 현재 세월호 운동 내의 엔지오 리더들은 민주당 정부와의 협력 기조가 강하다.

독립성

엔지오 운동은 “비정부기구”를 표방하는 것과는 모순되게도 “거버넌스”(협치)를 내세우며 주류 정치권 일부와의 협력을 중시하는 정치 운동이다. 한국의 엔지오 운동은 역사적으로 민주당/정부와 인적으로 엮여 왔다.

엔지오는 국가나 기업에게서 받는 재정 지원에도 의존한다. 416재단의 경우, 매년 25억 원 정도의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이중 대부분은 해수부로부터 나오고 나머지는 해경이 소속돼 있는 행안부로부터 나온다. 이런 관계 속에서는 정부와의 단절, 투쟁이 더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독립 국가기구”를 표방하는 사참위도 정권에게서 별로 독립적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약속을 미루고 외면할 때마다 사참위 뒤에 숨어 핑계를 대 왔다. 하지만 사참위는 고의 침몰/구조 방지 의혹 관련 기술적인 추가적 의혹을 제기하거나 음모론적 냄새를 풍기는 문제 제기에 치중해 왔다. 정부에게 별로 위협이 되지 않는 일들이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의 진정한 배경인 친기업적 신자유주의 정책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계속됐다. 이런 정책 기조는 단지 박근혜 정부나 우파 정당의 산물이 아니라, 경제 위기에 대처하는 한국 지배계급의 필요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런 필요가 여전한, 어쩌면 더 커진 상황에서 집권했다.

또 다른 참사의 배경인 친제국주의 정책(한미 동맹을 위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나 기업-국가 관료 사이의 부정부패 또한 문재인 정부 하에서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참사의 진실을 드러내고 사회를 바꾸는 일은 검찰이 수사하지도, 목적이 제한된 사참위가 해낼 수도 없는 문제들이다. 정부에게서 독립적인 대중 운동이 필요한 이유다. “생명보다 돈이 우선되는 가치관을 바꾸는 일, 안전보다 효율이 우선되는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일”(416재단 창립선언문)을 이뤄내려면 말이다.

재보선 이후

자본가 정치인들의 양당, 모두 딜레마

김문성

재보선 3주 후의 공식정치 상황을 요약하면, 불안정·불확실성의 더한 층 증대라고 할 수 있다.

우파 야당은 ‘국정 쇄신’ 등의 명목으로 자기네와의 협치, 더한층의 개혁 후퇴를 여권에 압박하고 있다. 백신 공급 실패는 한미동맹에 충실하지 않아서라는 비판으로 이어지는 식이다.

문재인은 백신 공급 문제를 만회하려고 4월 26일 화이자와 백신 2000만 개 공급 계약을 새로 맺었다고 발표했다. 다음 날에는 백신 위탁 생산 문제로 방한한 미국 노바백스 사장을 직접 만났다.

그러나 지금 계약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다. 화이자·모더나 등의 기존 계약 물량이 약속한 기한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는 선진국들의 자국 우선주의나 특허권 독점 탓도 있지만, 한국 정부가 그들의 눈치나 보면서 뒤늦게 움직인 탓도 크다.

혼란의 절정은 부동산 대책이다. 집값 관리에 실패해 부동산 불평등(양극화)이 심화한 것이 대중 이반의 핵심인데도, 여권은 오히려 종합부동산세 완화 카드를 꺼냈다. 우파적 압력을 수용해 부자들의 환심을 사는 것을 더 중시하는 것이다.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은 검찰-경찰 갈등, 공수처-검찰 갈등, 검찰 내 갈등으로 확대돼 왔다.

미·중 갈등으로 기업들이 받는 압박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길어지는 팬데믹 위기, 무엇보다 경기 침체와 저성

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자본가들은 국가 기관 간 분열을 참아 주기가 괴로울 것이다.

이런 혼란스런 상황으로 여권은 윤석열 후임 검찰총장을 쉽게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성윤을 임명했다가는 갈등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성윤은 심지어 기소될 수도 있다.

검찰과 청와대를 중재할 수 있는 인물을 찾고 싶을 텐데, 어려워 보인다. 그런 구실을 하라고 임명했던 민정수석 신현수는 검찰 인사 문제로 2월 하순 항명성 사퇴를 했다. 그는 문재인인의 오랜 측근인데도 말이다. 레임덕에 빠진 문재인이 여권 내 강경파를 통제하기도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 측 인사들에 대한 반대자들의 공격도 거세졌다. 검찰은 1년 3개월 전에 불기소 처분했던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다. 김상조가 공정거래위원장 시절 회의 기록을 파기한 것이 불법이라는 혐의다. 김학의 불법 출금 건으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친문 스피커 구실을 해 온 김어준도 TBS 방송에서 물러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혼란 겪는 국민의힘

이렇게 우파가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데, 정작 국민의힘은 우왕좌왕하며 혼란을 겪고 있다.

대선 풍향계가 될 수 있다면 선거에서 압승했는데도, 대선 전망이 마냥 밝지는 않다. 대선 여론조사에서 선두권



민주당은 개혁 배신으로 심판받고 개혁 포기로 혁신을 하려고 한다

은 고사하고 5퍼센트를 넘는 후보도 없다. 지지율 1위인 윤석열 영입을 공언하지만, 당 내부 역학 때문에 쉽지 않은 않다.

국민의힘 중진들이 이명박·박근혜 사면론을 꺼내 들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부패한 우파 정부의 주장들이 반성도 하지 않는 것(추징금·벌금도 내지 않고 있음)에 대한 여론의 반감은 큰 것이다. 물론 여론과 별개로 문재인이 올해 안에 지배계급의 내부 결속을 위해 그들을 사면할 가능성은 있다. 사면은 민주주의와 별 관계 없어진 지 오래다.

차기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인 제주시

사 원희룡이 이 틈을 이용하려고 김종인과 만나, “수구적인 모습을 못 버리면 다시 민심에 버림받게 될 것”이라며 사면 반대 목소리를 냈다.

4월 26일에는, 정권 퇴진 촛불 운동에 대한 계엄 집압을 검토하라는 박근혜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고 새누리당 전 당대표 김부성이 새삼 밝혔다. 당내 탄핵 불참파들에게 견제구를 날린 셈이다.

선거에서 중도우파 분철로 반사이익을 얻었지만 실체가 달라진 것이 아니므로, 선거 후 사기가 올라 오버하는 쪽과 이를 막으려는 쪽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는 것이다.

불신

이처럼 노골적 친자본주의 양당이 모두 곤란을 겪고 있다. 이것이 현재 두 당과 거리를 두고 공정과 중도(우파)를 이미지로 내세우는 윤석열이 여론조사에서 계속 1위를 고수하는 이유일 것이다.

경기 침체와 미·중 갈등이 촉발한 국제질서의 불안정도 국내 정치의 불안정을 키우고 있다. 특히, 후자는 지배계급의 정당들이 정치 안정을 위한 기초적인 협치도 흔히 잘 안 되는 이유다.

4월 27일 재계 5단체는 이재용 사면을 정부에 건의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이 격화되고, 미·중 갈등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일보>는 사설에서 이 사면 건의가 “재계의 일치된 위기감을 반영한다”고 보도했다.

지배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정치 질서를 안정화시키는 데 성공하는 듯한 동안에는 지지를 보내 왔다. 정부·여당의 포퓰리즘 전략이 행여 노동자·서민 대중에게 정부가 그들 편이라는 착각을 줘서 자체 행동에 나서게 할까 봐 노심초사해 왔지만 말이다.

그러나 이제 지배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현상 유지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 기업들이 바라는 규제 완화나 여러 개악들도 속도가 느리다. 문재인 정부는 자본가 계급의 요구에 부응하려 하겠지만, 이를 잘 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운동 지도부들을 붙잡아야 한다. 이렇게 모순이 커질수록 정치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도 커질 것이다.

냉혹한 문재인 정부, 루렌도 가족 난민 불인정 네 자녀와 9개월 공항 억류 전에도 모르쇠

임준형

최근 난민 루렌도 가족이 정부의 난민심사에서 불인정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12월 말 앙골라 난민 루렌도·바체테 씨 부부와 당시 10살도 되지 않았던 네 자녀는 피난처를 찾아 한국에 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가족에게 난민심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면서 입국을 불허했다. 결국 루렌도 가족은 9개월여 동안 인천공항에 억류돼 노숙 생활을 해야 했다.

탐사 전문 언론 <셜록>의 보도로 이 사실이 알려지자, 난민·이주·노동·사회·아동·종교 단체와 수많은 개인들이 루렌도 가족 입국을 요구했다. 일본과 호주 등 해외에서도 연대가 모였다.

루렌도 가족은 인권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난민심사 불허부 결정을 취소

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 끝에 승소했다. 법무부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당했다.

2019년 10월에 공항 억류 생활에서 벗어난 루렌도 가족은 한국 땅에 정착해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지난해 난민심사를 끝내고 최근까지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루렌도 가족의 난민 불인정 사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루렌도 가족이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루렌도 씨는 앙골라 국적자이지만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콩고 출신이다. 택시 운전을 하던 루렌도 씨는 경찰차와 충돌했다는 이유로 경찰서로 끌려가 구금과 고문을 당했다. 그사이 아내 바체테 씨는 경찰에게 성폭력을 당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들은 한국행을 선택했다.

앙골라에서는 국가 간 분쟁을 배경

으로 콩고 출신자들에 대한 심각한 차별과 추방, 박해가 벌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 인권 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앙골라 보안 부대가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콩고 출신자들을 추방하고 이민자들을 학대했다고 보고했다. 루렌도 가족이 도피하기 직전인 2018년 10월 한 달 동안에만 40만 명이 넘는 콩고 이주민이 추방됐다. 앙골라에서는 최근에도 경찰과 보안 부대가 거리 시위대에 무차별 총격을 가해 사망자가 발생했다.

바체테 씨는 공항에 억류돼 있는 동안 건강이 악화돼 치아를 6개나 뽑았고, 안압이 높아져 실명 위기를 겪기도 했다. 아이들은 “결국 이렇게 공항에서 서서히 죽게 되는 것이냐”고 부모에게 물기도 했다. 당시 루렌도 가족을 접견해 의료지원을 했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송훈 정신의학전문의는 <한겨레> 기고문에서 이렇게 말했

다. “한국에서 8개월째 겪고 있는 일만으로도 이들은 이미 난민이다.”

파급 효과

법무부 측은 루렌도 가족의 난민심사 불허부 취소 소송 과정에서 난민 신청 권리를 제한하지 않으면 누구든 난민 신청을 해 “국경 수비에 큰 타격을 준다”고 말했다. 난민을 침략자로 보는 인종차별적 인식이다.

또한 당시 법무부는 난민심사 회부에 대한 판단은 “개개 사건”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사건의 파급 효과”를 고려한다고 말했다. 행정의 고려사항이 절박한 난민들의 상황이나 난민을 얼마나 적게 받을 수 있는지라는 뜻이다. 루렌도 가족의 상징성을 따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다. 루렌도 가족에 대한 난민심사도 이런 태도로 진행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하에서 난민 신청자는 감소하는데 난민 불인정자는 크게 늘

었다. 난민 인정률은 2019~2020년 연속 0.4퍼센트(2004년 이래 최저)로 떨어졌다. 얼마 되지도 않던 난민 신청자의 생계비 지원액은 2018년 이후 3년째 동결됐다. 지난해 말에 문재인 정부는 난민을 더욱 쉽게 내쫓을 수 있게 하는 난민법 개악안도 발의했는데,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 언제든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이다.

루렌도 가족은 광범한 연대 운동 속에 공항을 겨우 벗어났는데, 법무부가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런 성과를 되돌리는 것이다.

루렌도 가족은 난민 불인정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누구나 이유가 무엇이든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어야 있다.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정부는 루렌도 가족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난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야 한다.

20대 남성, 안티 페미니즘인가?

이현주

4월 7일 재보선 선거 이후, “20대 남성의 반페미니즘 정서 때문에” 민주당이 패배했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전 최고의원 이준석이 “민주당이 여성주의 운동에만 ‘올인’한 결과” 20대 남성의 반발을 사 패배했다고 주장한 것이 발단이였다. 뒤이어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프레임을 받아들이며 ‘떠나간 이대남(20대 남성)’의 표심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진보·좌파 일각에서도 동기와 방향성은 다르지만, 비슷한 전제를 공유하는 주장들이 나왔다.

그러나 지난 4·7 재보선 선거는 지난 4년간의 민주당 정부의 개혁 배신을 심판한 선거였다.(관련 기사: 민주당 재·보선 참패 — 개혁 배신이 불러온 환멸과 분노의 굴절된 표현) 이 점은 세대와 성별을 가리지 않고 나타난 특징이였다.

이준석 류의 주장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청년들의 반감을 우파 측에 유리하게 흡수하려고 진정한 원인을 호도하는 꼼수일 뿐이다.

이번 재보선에서 20대 남성과 여성의 표심이 갈렸다는 주장은, 20대 남성이 오세훈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낸 반면 20대 여성은 오세훈보다 박영선에 더 많이 투표하고 그 비중이 남성의 두 배에 이른다는 점에 주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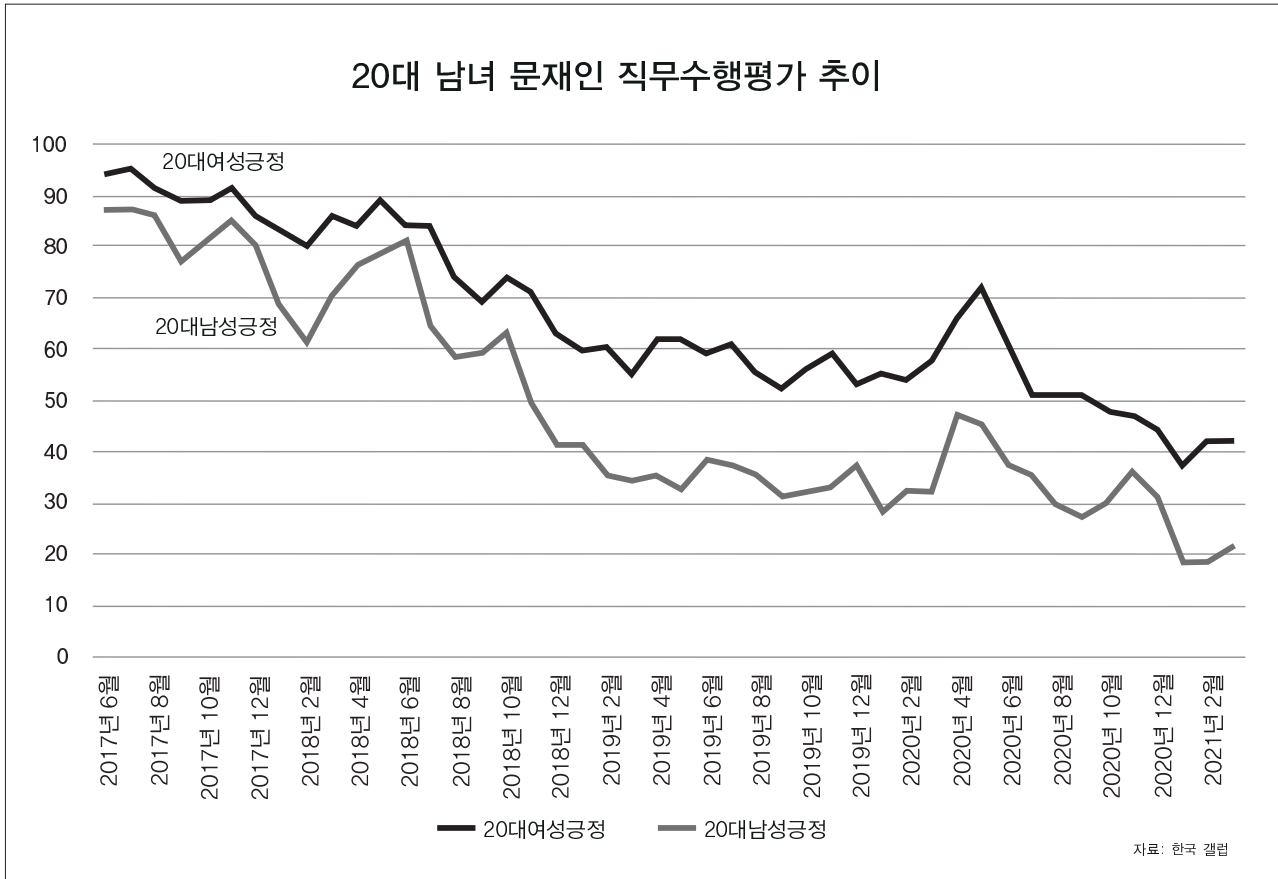
그러나 만약 ‘오세훈 vs. 박영선’이 ‘반페미니즘 vs. 친페미니즘’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민주당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40대 남성이 가장 친페미니즘적인 성향을 보여 줬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볼 만한 근거가 있나? 민주당 소속 전임 시장들의 성추행 의혹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민주당이 여성들에게 친페미니즘적으로 비쳐졌다고 볼 근거는 무엇인가?

선거가 치러진 전체 맥락을 떼어 놓고, 몇몇 단편적 사실만 가지고 결과를 분석해선 안 된다.

만약 ‘문재인 정부는 친페미니즘 vs. 이대남은 반페미니즘’ 프레임이 진실이라면, 20대 여성들이 몇 년 전 문재인 정부가 ‘말뿐만 페미니즘’이라고 강력히 성토했는 대중 운동에 참가하는 등 정부 지지를 거둬들인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또,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한)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 20대 남성의 높은 지지율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특히, 이런 주장은 20대 여성 중에 박영선을 지지한 사람(44퍼센트)보다 지지하지 않은 사람(56퍼센트)이 더 많다는 점을 간과한다. 20대 여성 사이에서는 ‘기타 후보’ 지지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다. 아마도 젊은 여성들 일부에게는 문재인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를 표현하는 데서 오세훈 말고 다른 선택지(여성 이슈를 전면에 내세운 후보들)가 있다고 느꼈을 법하다.

진실은 문재인 정부의 ‘페미니스트’ 선언이 립서비스에 그쳤고, 정권 초기



젠더 갈등 아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의 지지도는 동반 하락 추세였다

20대 남성과 여성의 다수가 문재인 정부에 기대했지만 그 기대가 배신당하면서 4년이 지난 지금 두 집단 모두에서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애초부터 여성보다 남성의 지지율이 더 낮았고 더 빨리 하락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동반 하락 추세임이 더 중요하다. 특히, 청년들은 조국, 윤미향 사건, LH부동산 사태 등에서 정부와 집권당이 보이는 내로남불과 위선에 크게 분노했다.

복수(複數)의 페미니즘

한편, 재보선에서 민주당의 패배를 친페미니즘 정책 때문이라고 보지는 않으면서도, ‘20대 남성이 반페미니즘적’이라고 인정하는 견해가 있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봐야 할까?

페미니즘에 대한 20대 남성의 반응과 정서를 정확히 평가하려면 먼저 페미니즘의 개념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오늘날 ‘페미니즘’이라는 말은 여성 평등 사상과 운동의 특정 조류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여성평등 사상·운동을 일반적이고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20대 남성의 ‘반페미니즘’ 성향을 운운하는 사람들이 ‘페미니즘’을 하나(통일체)로 가정하지만, 페미니즘은 결코 하나가 아니다. 페미니즘은 중도에서 좌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혁명적

좌파의 입장에서 여성 해방을 추구하는 쪽도 이런 넓은 의미에서는 그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한국에서 가장 우세한 페미니즘 조류는 급진 페미니즘이다. 급진 페미니즘은 사회의 근본 분열이 계급이 아니라 젠더, 곧 남성과 여성 사이에 있고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면서 여성 평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 상층을 이루는 주요 여성단체 지도자들은 정치적으로는 친 민주당 개혁주의를 실천해 왔다. 그들은 민주당 정부의 관료나 국회의원으로 진출함으로써 성평등 권리와 기회, 권한 확대를 추구해 왔다.

그러나 급진 페미니즘의 기층 지지자들은 이보다 폭이 훨씬 넓고 대체로 지도자들보다 정치적으로 왼쪽에 있다. 아무튼 이들이 모두 정치적으로 친 민주당 개혁주의로 수렴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불법촬영 반대 운동(불편한 용기), 낙태죄 폐지 운동(비웨이브) 등을 조직하며 문재인 정부를 날카롭게 비판한 측도 있었다. 이들은 급진 페미니즘의 극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분리적 페미니즘을 나타낸다. 즉, 남성에 대한 적대와 명시적 반대를 표현하는 종류의 페미니즘이다.



20대 남성을 싸잡아 성평등에 보수적이라고 매도하면 안 된다

반페미니즘?

이렇게 보면, 20대 남성이 대부분 여성평등 사상·운동으로서 “페미니즘”에 반발하고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

물론 여성평등에 부정적인 보수적인 인사들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페미니즘에 불만을 표하는 이들이 모두 이런 부류인 것만은 아니다. 요즈음 지배적 조류인 급진 페미니즘이 모든 남성을 기득권자 또는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하면서 남성 일반을 싸잡아 매도하고 백안시하다 보니, 여기에 불편함을 느끼는 남성도 있는 것이다.

이들의 불만을 페미니즘 일반이나 성평등 가치에 대한 반대로 해석하는 것은 일면적이다. 가령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 20대 남성 중 페미니즘에 지지를 보낸다고 답한 비율은 응답자의 7.3퍼센트였지만, 미투 운동이나 낙태죄 폐지 운동, 해화역 시위에 대한 지지는 각각 56퍼센트, 58퍼센트, 48퍼센트로 나타났다. 특정 페미니즘 노선을 성평등 요구 및 그 운동과 구분해서 보는 것이다.

또한 ‘시민의식 조사자료’(한국민주주의연구소·한국리서치) 등을 토대로 한 ‘20대 남성 현상 다시 보기’(최종숙, 2020년) 논문에 따르면, “20대 남성의 성평등 의식은 3040세대 남성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20대 남녀의 성평등 의식 격차도 다른 세대 남녀에 비해 크다고 하긴 어렵다.”

전통적 성별 규범에 대한 동의도나 온라인 상에서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유통한 경험이 있는 비율도 다른 세대 남성보다 20대 남성이 오히려 더 낮다.(마경희 ‘한국의 변화하는 남성성과 성차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요컨대, 20대 남성이 반페미니즘적이라고 보는 것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이다.(진실은 총체적이지, 반쪽이지 않다.)

이런 점들을 보지 않고 진보·좌파 측이 급진 페미니즘의 가정들을 받아들이며, 20대 남성을 싸잡아 성평등에 보수적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크게 부적절할 것이다. 우파가 안티 페미니즘을 내세워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청년들을 포섭하는 상황에서 이런 매도는 우파들에게 젊은 남성들을 넘겨 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물질적 조건의 변화

젊은 세대의 성평등 의식 변화의 근저에는 한국 자본주의의 성장에 따른 물질적 조건의 변화가 있다. 여성 노동력이 경제의 주요한 일부로 자리 잡았다. 여성의 임금노동 참여가 늘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여성의 자의식이 성장했다. 그리고 여성과 남성이 맺는 관계에 변화가 생겼다. 그 결과, 여성 평등을 요구하는 정서가 커진 것이다. 사회의 이런 변화는 노동운동에도 반영돼 왔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분출한 여성 해방 운동도 사회적 의식의 변화에서 한 구실을 했다. 미투 운동, 불법촬영 반대 시위, 낙태죄 폐지 운동 등은 여성뿐 아니라 많은 남성들로부터도 지지를 받았다. 이런 운동들은 여성 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환기시켰고, 노골적 비하나 차별적 용어 사용을 반대하고 주의하는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급진 페미니즘 사상은 사람들 개개인의 의식과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주력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문화 면에서는 일부 성과를 얻었지만, 여성의 실질적인 조건을 개선하는 데서는 근본적 한계를 보였다.

급진 페미니스트 지도자들은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에 압도적 강조점을 두면서, 여성의 다수인 노동자들이 겪는 동일임금 문제나 보육 문제, 그 밖의 다른 여성 노동자 조건 문제에는 그만한 열의를 보이지 않았다. 반세기 서구 여성운동 경험에서 보듯이, 사회의 중간층과 상층 지위에 여성들이 늘어난다고 여성 노동자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특히, 여성계 지도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말만 번지르르하게 할 뿐, 실제로는 여성의 염원을 배신하고 특히 노동계급과 서민층 여성들의 조건을 공격할 때 만만찮은 반대를 건설하지 않았(못했)다.

그러나 전례 없는 감염병 위기와 경제 위기 속에서 노동계급과 서민층 여성들의 고통이 나날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자본주의 체제를 구하기 위한 지배계급의 고통 전가의 일환으로 여성 차별은 오히려 강화돼 왔다.

성차별을 없애고 여성 해방을 이루려면 젠더 이분법적 세계관이 아니라, 여성 차별의 뿌리인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세계관이 필요하다. 이런 세계관에 따른 정치적 투쟁 속에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의식도 크게 바뀔 수 있다.



올해 2월 구직 단념 등을 포함한 실질 실업자는 468만 명에 달했다. 4월 13일 서울서부고용센터에서 일자리 게시판을 보고 있는 구직자들

경제 회복? “정상궤도 진입” 아니다

정선영

한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1.6퍼센트를 기록했다. 올해 성장률이 4퍼센트를 넘을 수 있다는 낙관론도 나온다. 문재인은 한국 경제가 “코로나의 어둡고 긴 터널을 벗어나 경제 성장의 정상궤도에 올라섰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은 “정상궤도” 진입과 거리가 멀다. 한국 경제는 2009~2019년 동안 연평균 3퍼센트 성장을 했다. 설사 올해 한국 경제가 4퍼센트 성장한다 해도 지난해(마이너스 1퍼센트 성장)와 올해 평균 성장률은 1.5퍼센트다. 이전 추세를 한참 밀도는 것이다. 2010년대 성장률도 2000년대 5퍼센트가량이던 것에 견주면 낮았는데 말이다. 그래서 지난 10년은 장기불황이라고 일컬어졌다.

게다가 올해 성장에 대한 낙관이 현실이 되기에는 위험 요소가 너무 많다. 올해 1분기 민간 소비는 전 분기보다 1.1퍼센트 올랐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올해 방역이 완화된 영향일 것이다. 그러나 방역 완화는 곧장 코로나 19 4차 유행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백신 수급도 불확실하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도 존재한다. 소비 회복세가 계속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현재 한국 경제의 회복은 주로 수출 증가와 대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에 기대고 있다. 한국은행 조사를 보면, 한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인 2019년 4분기를 1로 봤을 때 올해 1분기 민간소비는 0.945, 건설투자 0.98로 여전히 축소된 상태다. 반면, 수출은 1.031, 설비투자는 1.126으로 2019년 말 수준을 넘어섰다.

한국의 수출 증가는 주로 반도체 등 IT 산업의 호조에 기대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자동차, 휴대폰 등의 수출도 늘었다. 미국과 중국이 지난해 침체에서 반등하고 있는 덕을 본 것이다.

유럽은 백신 접종이 더디고 코로나 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어 여전히 위축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일본도 비슷하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반면 미국은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실시와 함께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그래서 2분기부터 대폭 회복해 올해 성장률이 6.5퍼센트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바이든은 소비 진작을 위해 지난 3월에 1인당 1400달러(155만 원)가량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중국은 세계 주요국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다. 올해 8퍼센트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회복세도 과장할 만한 것이 못 된다. 미국의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회복세는 더디고 장기 실업자로 전락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미국에서 27주 이상 실업자의 수는 2020년 2월 111만 1000명에서 12월 395만 6000명, 2021년 3월 421만 8000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낙관적인 전망에 따르더라도 지난해와 올해 성장률 평균은 미국 1.5퍼센트, 중국 5퍼센트가량으로 여전히 과거보다 낮다. 진정한 경제 회복이라기 보다는 기저효과에 따른 부분적인 반등에 불과한 것이다. 게다가 변이 바이러스 등 코로나19 상황의 불확실성과 부채 위기 등 위험 요소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구조조정

장기적으로 보면 세계 경제는 2008~2009년 금융 위기 이후 장기 불황을 겪은 데 이어,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아 더한층 깊은 불황에 처하게 될 공산이 크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불황을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역설적이게도 자본 파괴라는 점을 지적했다. 수익성이 낮은 비효율적인 기업

들이 파산해 실제 공장과 기계가 폐기되거나, 파산하는 기업들이 혈값에 다른 기업들에게 인수·합병되는 과정을 통해 나머지 기업들의 이윤율을 올려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과도하게 부풀어 오른 금융자본이 파괴되는 과정도 부실한 영역을 구조조정 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와 같은 자본의 구조조정은 거의 벌어지지 않았다. 경제가 파괴적으로 붕괴하는 것을 막으려고 각국 정부들이 기업 살리기에 적극 나섰기 때문이다. 그 결과 부실기업들이 살아남았다. 한국에서도 지난해 3분기 말 기업 10곳 중 4곳이 운영을 해도 이자도 벌지 못하는 한계기업으로 분류됐다. 1년 전보다 4.5퍼센트 늘어난 것이다.

이윤율은 코로나19 이전에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었는데, 코로나 19 상황은 이를 더욱 악화시켰을 공산이 큰 것이다.

경제에 부담이 되는 부채 문제도 더 심각해졌다. 지난해 세계적으로 기업·정부·가계 부채는 모두 크게 증가했다. 더 늘어난 부채 부담은 기업, 은행, 가계 등의 파산으로 이어져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소비와 투자를 줄여야 한다는 압력으로 작용해 경제 성장을 끌어내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결국 향후 경제 상황은 정부 지원에 기대 근근이 성장하거나, 정부 지원이 줄어들면 기업과 은행들의 파산 가능성이 커지고 신흥국 등 취약한 국가들의 위기가 심화되는 ‘긴축 발작’이 벌어질 수 있다.

물론 이 때문에 주요국 정부들은 여전히 경기부양책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 저성장 속에 늘어나는 부채 부담은 회피할 수 없는 문제일 것이다. 이를 누가 짊어져야 하느냐를 둘러싸고 계급 간의 쟁투는 앞으로 더욱 격화할 것이다.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록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 위기·팬데믹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 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고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춰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기후 위기 같은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려면 새 사회가 건설돼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없어져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직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 위기, 팬데믹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고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

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 자결에 반해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권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억제를 반대한다. 특히, 우리는 거짓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갖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 기반 운동이 건설돼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돼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들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면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긍되면 우리와 함께합시다.

바이든 정부 100일 뜻밖의 변화도 있었지만 진정한 우선순위는 패권과 이윤 회복

김준호

4월 29일은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지 100일 되는 날이다.

바이든은 7선 상원의원에 부통령까지 지낸 미국 기성 정치의 ‘화신’ 같은

인물이다. 취임 후 바이든은 트럼프의 가장 악명 높던 몇몇 정책을 되돌렸고, 클린턴·오바마 등 전임자보다 야심찬 정책들도 일부 추진했다. 하지만 트럼프와 다를 바 없는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바이든의 우선순위

바이든은 4년 전 백악관을 떠날 때보다 위기가 더 악화된 상황에서 취임했다. 미국 경제는 2007~2008년 이후 장기 불황을 겪어 왔고, 코로나19 팬데믹까지 덮쳐 한 세기 만에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다.

제국주의 경쟁도 격화되고 있다. 헤게모니는 여전히 미국에 있지만, 세계 주요 경제 블록들(미국/유럽연합/중국) 간 갈등은 훨씬 커졌다.

또, 이런 요인들이 정치적 불안정을 키워, 좌우 양쪽에서 주목할 만한 운동이 형성됐다. 한편에서는 중첩된 위기의 피해를 불평등하게 겪는 데 대한 거대한 분노가 대규모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으로 분출했다. 그 반대편에서는 위험한 극우 운동이 성장해, 바이든이 취임하기 고작 2주 전에 바이든 대선 승리를 부정하며 국회의사당에 난입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은 미국을 “구제”해야 하는 과제를 맡았다.

바이든은 청정 에너지 계획에 4년 동안 약 2조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고,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구제 계획”을 통과시켰으며, 바로 뒤이어 2조 달러 규모의 “미국 일자리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1960년대 린든 존슨의 ‘위대한 사회’ 건설 계획 이래 가장 야심찬 계획으로 주목받았다.

“미국 구제 계획”에는 백신 개발 지원, 기업 지원 등뿐 아니라 재난지원금 1400달러 지급, 실업급여 예산 확충도 포함돼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 대중의 거대한 울분을 의식한 것이기도 하다.

2008년 위기 때 오바마 정부가 부자들만 구제한 것 때문에 “1퍼센트”에 저항하는 ‘월가를 점거하라’ 운동이 벌어졌고, 이는 이후 몇 년 동안 일련의 대중 운동을 촉발하는 불씨가 됐다.(버니 샌더스 돌풍도 그런 운동들 덕분이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위기를 틈타 극우 운동이 성장했다.(트럼프가 이를 부추겼다.)

이 때문에 미국 지배계급의 주류는 아래로부터의 반발을 사지 않으면서 자기 필요를 충족하려면 경제·전염병 위기의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사람들을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듯하다.

하지만 이 “구제 계획”이 진정으로

구제하려는 것은 미국 자본주의다.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미국에서 금융 부문뿐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국가의 개입과 지원에 의존하게 됐다. 대기업들도 연준의 저금리 정책과 막대한 정부 재정 지출에서 득을 봤다.(관련 기사 본지 351호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로나19도 멈추지 못한 자본주의의 변화’)

바이든은 특히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 자본의 우위를 보장하려면 막대한 국가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여긴 듯하다. 그래서 ‘작은 정부’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집착을 일부 내려놓아야 했다. 막대한 재정 지출뿐 아니라, 그 재원을 (차입뿐 아니라) 자본수익세 등을 증세해 충당한다는 계획도 신자유주의의 교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기후 변화 대응도 중요한 요인이다. 기후 재앙에 대처해 “안정”을 되찾으려면 인프라를 재편·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국가 재정을 대규모로 투입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바이든의 정책들이 마음에 쏙 들지는 않을 법한데도 미국 대자본들이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까닭이다. 미국 대기업 고위 이사 150여 명이 바이든의 “미국 구제 계획”을 통과시키라고 의회에 촉구했다. 대선 기간에 〈파이낸셜 타임스〉가 사설에서 지적했듯이, “바이든노믹스가 자본주의에 대한 지지를 지킬 수 있다”고 봐서였다.

“구제”?

하지만 보수 성향의 미국 역사가 로버트 만이 지적하듯, “바이든은 진보파를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지만, 진보파가 정부 정책 방향을 좌지우지하게 용인할 수도 없는 처지다.” 바이든의 진정한 우선순위는 **자본주의**의 구제에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의 “구제”는 대중적 울분의 근원인 불평등을 해소하거나 빈곤을 근절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미국 구제 계획”은 연소득 7만 5000달러(2020년 미국 가계 중위 소득에 조금 못 미친다) 이하 성인에게 재난지원금 1400달러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다. 이는 성인 모두에 2000달러를 즉시 지급하겠다는 선거 공약에서 후퇴한 것인데, 이 후퇴 때문에 성인 약 1200만 명이 지원 대상에



바이든 정부 100일은 미국 자본주의·제국주의를 “구제”하려 애쓴 시간이었다

서 제외됐다. 게다가 이런 일시금 지급은 트럼프 때도 있었던 일이다.

또, 바이든은 연방 최저임금 기준을 15달러로 인상하는 안을 철회했다.(실망스럽게도, 상원 예산위 의장이 된 샌더스가 이 철회를 적극 변호했다.) 약 10년 전에 정해져 이제는 빈곤선 기준보다 약간 높은 정도여서, 많이 부족한 인상인데도 말이다. 그럼에도 이 인상안이 통과됐다면 약 100만 명이 빈곤선에서 벗어났을 것이다.

바이든은 대자본의 이해관계를 지속적으로 침해할 정책들은 한사코 피했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전국민 단일 건강보험(메디케어 포 올) 공약을 거부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바이든은 민간 보험회사들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의료보험을 개선하겠다고 했다.(‘오바마케어’의 부활이다.) 이 정책 때문에 비교적 가난한 계층에서 보험 가입자가 조금 늘 수는 있다. 하지만 여전히 평범한 사람들 다수는 비싼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것이고, 민간 보험회사들의 이윤은 보장될 것이다.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는 바이든 정부의 내각도, “진보”, “다양성” 운운하는 상찬에 걸맞지 않다. 외려 친기업·친제국주의자들의 소굴이라는 말에 더 걸맞다.(관련 기사 본지 347호 ‘바이든 내각은 친기업-반노동 소굴’ ‘민주적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는 물론이고,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진보적 자유주의’ 인사들조차 배제됐다.

“미국이 돌아왔고, 세계를 주도할 준비가 돼 있다”?

대선 당시 바이든 캠프의 핵심 참모 한 명은 바이든의 대외 정책 기조를 이렇게 요약했다. “중국, 중국, 중국, 러시아.” 이는 미국의 도전자인 중국의 부상 이 두드러지는 현실을 의식한 것이다.

바이든은 취임 후 이에 대응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국의 헤게모니를 수호하려 하고 있다. 4월에 바이든이 아프가니스탄 점령 종식을 선언한 것도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에 대처하려면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기 때문이다.(이에 관해서는 이번 호에 실린 닉 클라크의 기사를 보시오.)

바이든은 조장부터 강경한 대중(對中) 기조를 드러냈다. 취임 첫 주말에 미국 항공모함 전단이 남중국해를 항행했고, 취임 후 첫 미·중 고위급 외교 회담에서는 가시 돌진 설전이 벌어졌다. 바이든은 취임 첫날 트럼프의 정책으로 유명한 ‘미국산 구입’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바이든은 미국 단독으로가 아니라 동맹국들을 결집시켜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려 한다. 대선 때부터 바이든은 “국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해 ‘권위주의’의 부상에 맞서자고 했다.(하지만 그 ‘민주주의’ 정상들 중에는 권위주의적 조치를 동원해 대중을 억압하는 자들도 있기 때문에, ‘민주

주의’는 실질적 의미가 없고 반(反)중국 이데올로기 수사다.)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도 바이든의 카드에서 빼놓을 수 없다. 바이든은 이미 막강한 미국의 군사력을 더한층 강화하려고 7000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국방비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남중국해가 갈등이 불거지는 장이 되고 있다. 바이든은 취임 직후 남중국해에 항모전단 2개를 파견해 모의 전투 훈련을 시행하는 등, 조장부터 트럼프 정부 말기 수준의 도발적 군사 행동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에 해역 통제력을 넘기지 않겠다는 무력 시위인 것이다.

이런 일련의 행동들이 당장 전면전으로 이어진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중 지배계급이 축적된 갈등의 해결책으로 군사력을 최종 고려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안정”으로 회귀?

중동에서도 바이든은 “안정”으로 회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중동에서 이 말은 제재·위협·전쟁으로 미국의 뜻을 관철한다는 뜻이다.(관련 기사 본지 345호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끝없는 전쟁들”의 회귀 예고하는 바이든’)

▶ 7면으로 이어짐



코로나19·기후 재앙 대응 ... 나은 듯하지만 과연?

▶ 6면에서 이어짐

바이든 취임 1주일 만에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페르시아만 상공을 비행했고, 취임 1개월 만에 “중동에서 [미국의] 국익을 보호”(국방부 대변인 존 커비)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백악관 대변인 젠 사키) 시리아를 폭격했다. 이란에 대해서도 핵 합의 복귀를 말하는 동시에 고강도 제재를 들먹였다.

그러면서 바이든은 미국 제국주의의 ‘경비견’ 이스라엘과의 굳은 관계를 재확인했다. 바이든은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 트럼프의 결정을 뒤집지 않았다고 못 박았고, 이스라엘에 연간 38억 달러의 군비를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는 협정을 계속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NBC 뉴스>도 “팔레스타인인을 입장에서는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평했다.

또, 바이든은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 등 다른 역내 동맹국들과의 군사 협력도 더 강화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미군 기지가 건설되고 있고, 아랍에미리트에는 전투기를 판매했다.

이런 일련의 행동으로 바이든은 중동의 “안정”을 도모하고, 거기서 생긴 여력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 경쟁 강대국들을 상대하는 데에 집중하고자 한다.

하지만 상황이 바이든의 뜻대로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라크 전쟁 이후 중동의 세력 구도가 변했고, 러시아·터키·프랑스 등 열강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미국이 이 상황을 관리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미국의 헤게모니를 굳히려는 바이든의 시도들 때문에 세계가 점점 더 불안정해지리라는 것이다.

바이든이 취임 전부터 트럼프와 가장 확실히 선을 긋고자 한 부분은 코로나19 대응이었다.

바이든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팬데믹에 대처하겠다고 해 (이를 사실상 사보타주했던) 트럼프에 견줘 낫다고 여겨졌다. 백신 접종 실행을 코앞에 둔 시점에 취임했다는 점도 바이든에게 호재로 작용했다.

하지만 바이든의 대응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이든은 전국적 공공의료 체계 수립 권고에 모르쇠로 대응했고, 과로에 시달리는 의료 인력을 충원하게끔 하지도 않았다. 일터에서의 코로나19 방역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이를 어긴 기업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이런 조치들이 있었다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바이든은 전체 교사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이 수립되기도 전부터 등교 재개를 앞장서서 밀어붙이기도 했는데, 이는 전염병 대응보다 학부모인 노동자들을 일터로 돌려 보내는 것을 우선한 것이다.(바이든은 교사들의 아래로부터 투쟁에 부딪히고서야 교직원들을 등교 재개 전 백신 우선 접종 대상으로 지명했다.)

더 근본적인 측면에서 보면, 바이든은 요양원 산업의 수익성 원리는 건드리지 않는다. 미국 자본주의의 이윤을 회복을 더 중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양원들이 이윤 때문에 기본적 방역 절차조차 지키지 않았던 탓에 수많은 노인들이 감염에 노출된 바 있다.(관련 기사 본지 315호 ‘마이크 데이비스 논평: 코로나19: 기어이 괴물이 오고야말았다’)

바이든 정부의 공공 의료 지원책도 미미한 수준이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수석 부국장 앤 슈캇조차 “공중보건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전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각종 감염병을 양산하는 미국의 대규모 농축산업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하지 않는다.

이런 근본적 문제들을 방치하는 한 미국에서 팬데믹은 언제든 다시 유행할 수 있다.

재앙

바이든이 트럼프와 선을 긋고자 한 또 다른 부문은 기후 위기에 관한 것이다.

트럼프는 기후 위기 자체를 부정했다. 하지만 바이든은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했고, 환경운동과 원주민 운동의 오랜 요구를 받아들여 키스톤 XL 송유관 매립 사업*을 중단시켰다. 또, 트럼프 시절 완화된 환경 관련 규제 100여개를 되돌리겠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은 상징적인 수준이고, 많이 부족하다.

파리기후협약도 그 사례다. 이 협약은 현재 위기에 대처하기 턱없이 부족한

뿐 아니라, 구속력도 없다.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있던 오바마 정부가 앞장서서 이 협약을 종이 조각으로 만들었다.(관련 기사 본지 184호 ‘파리 기후변화협약 발효: 기후 위기 해결은커녕 심화시키는 체제의 무정부성을 보여 준다’)

바이든은 상징성이 큰 키스톤 XL 사업은 중단시켰지만, 비슷한 규모의 다른 송유관 매립 사업들은 건드리지 않았다. 또, 바이든은 연방 소유 부지를 천연가스 시추를 위해 신규 불하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미국 내 천연가스 중 연방 소유 부지에서 시추되는 것은 10퍼센트에 불과하다. 게다가 바이든은 기존에 불하된 연방 소유 부지에서 시추하는 것은 전혀 문제 삼지 않았고, 외려 그런 곳들에서 신규 시추를 31건

☞ 용어설명

키스톤 XL 송유관 매립 사업

오바마 정부가 승인한 대형 송유관 매립 사업으로, 미국 중부에서 캐나다에 이르는 방대한 지역에서 환경 재앙을 낳을 것으로 예상돼 반대 운동이 벌어졌다.



점점 악화되는 기후 재앙에 대응하려면 바이든의 상징적 조치로는 부족하다. 지난 2월 텍사스 한파

이나 승인했다.

바이든은 기후 위기 대응에 2조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했다. 어마어마한 액수지만, 비영리 단체 ‘생물다양성센터’의 브렛 하틀이 지적하듯 이는 “기후 비상사태에 맞설 최후의, 그리고 절호의 기회를 허비하는 ... 친기업적 계획”이다.

바이든의 기후 특사 존 케리는 기후 위기 대응을 민간 기업이 주도해야 하고, 정부는 “보조적” 구실만 해야 한다고 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윤이고, 이윤 추구를 환경보다 우선한 것 때문에 오늘날 기후 위기가 심각해졌다.

기후 위기에 제때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국가 주도의 대응이 필수적이다. 교통 문제를 보면 이를 알 수 있는데, 자가용 중심으로 형성된 미국 교통체계를 친환경적 대중교통 중심 체제로 제때 전면 전환하는 것은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급진적인 기후 위기 운동은 국가가 대대적인 환경 대응에 나서라고 요구하며 행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저명한 미국 마르크스주의자 마이크 데이비스가 지적했듯, 바이든의 “청정 에너지 ‘혁명’은 ... 민간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지 공적 영역을 확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바이든은 자동차 대기업 GM에 전기차 생산을 위한 보조금을 기꺼이 지급하겠지만, 미국 자본주의의 중요한 뿌리 중 하나인 자동차 산업에는 도전하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이 [환경 문제에 대한] 기업의 통제력이라는 난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 기후 재앙에서 미국을 구하지 못할 것이다.”(‘생물다양성센터’ 소장 키어런 서클링)

변화를 이룰 힘은 어디에 있는가

바이든 취임 후 미국의 극심한 정치 불안정은 일시 수면 아래로 내려간 듯 보인다. 하지만 바이든의 “구제” 정책들은 그 정치 불안정의 근원, 즉 위기와 그에 대한 대중의 쓰라림을 해소하지 못할 것이다.

인종차별 문제를 봐도 그렇다. 바이든은 트럼프의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정서에 기대 당선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바이든은 조지 플로이드 살인범 데릭 쇼빈 유죄 판결이 “정의 구현”이라고 찬양했지만, 판결 얼마 전 돈테 라이트 사망으로 촉발된 경찰의 흑인 살해 규탄 시위는 비난했다. 인종차별적 경찰도 그대로다. 쇼빈이 유죄 판결을 받은 지 고작 몇 분 후

오하이오주(州)에서 흑인 청소년이 경찰의 손에 죽었다.

바이든은 트럼프의 이민자 단속·추방과 강제 수용 정책을 짐짓 비판하고 이민자들을 위한 8년에 걸친 시민권 획득 절차를 제시했지만(이는 미국 농축산업 등 대자본에 저임금·이주 노동력이 필요한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취임 한 달도 안 돼 악명 높은 이주민 강제수용소를 재개장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등 진보파 하원의원들 “스쿼드”는 이런 문제들에서 종종 바이든의 정책을 날카롭게 비판해 인기를 얻고 있다. 버니 샌더스는 바이든 정부가 “루스벨트 이래 가장 진보적”

이라며 상원 예산위 의장으로서 정부·여당을 적극 돕지만, 노동계급 대중을 위한 입장에서 정부 정책에 가끔 쓴소리도 한다.

하지만 이들 모두 그런 비판을 운동으로 연결하지는 않고 있다. 변화를 이룰 힘이 의회에 있다고 믿는 전락 때문이다.

아래로부터

하지만 진정한 힘은 의회 바깥에 있다.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은 이를 잘 보여 줬다. 최근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경찰 데릭 쇼빈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대중 운동의 파장이 재판정을 압박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연방최저임금 15달러 인상 계

획은 좌절됐지만, 노동자들이 거리 시위로 (불충분하나마) 압력을 형성한 덕에 몇몇 주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된 사례도, 진정한 변화는 아래로부터 대중 행동으로 이룰 수 있음을 흘깃 보여 준다.(바이든이 4월 27일에 연방정부 계약직 노동자들의 최저시급 기준을 15달러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을 낸 것도 그런 압력이 표현하는 대중적 반감을 의식해서다.)

게다가 샌더스와 “스쿼드” 의원들이 몸담고 활용하려는 민주당은 자본의 이해관계에 도전하는 노동계급의 요구를 제약하기 위해 작동하는 정당이다. 이런 정당의 힘을 이용해 노동계급 대중을 위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여기면 한계에 부딪

히기 십상일 것이다.(관련 기사 본지 315호 ‘미국 민주당은 어떻게 진보 연원을 좌절시켜 왔는가’)

미국 대중이 바이든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거리와 작업장에서 계속 투쟁해야 할 이유다. 그런 운동으로 위기에서 자신들만 구제하려는 지배자들에 도전해야 하고, 트럼프 시기를 거치며 위험하게 커진 극우·파시즘에도 맞서야 할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위기의 근원을 설명하고 그에 맞서 반자본주의적 투쟁을 건설하는 혁명적 운동이 성장하기를 바란다.

이 글은 미국의 혁명적 사회주의 단체 ‘마르크스21’ 회원 에릭 프레스츠가 쓴 ‘바이든 100일을 참고해 썼다.

심화하는 제국주의 갈등 속에 미국의 쇠퇴 막으려 애쓰는 바이든

닉 클라크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기로 했지만, 미국 제국주의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무력을 사용할 것이다. 자본주의 작동 방식 자체가 어떻게 끊임없는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지 살펴본다.

조 바이든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발표한 그 주에 군비를 7530억 달러 증액하자고 제안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접경한 지역에 많은 병력을 배치한 상황에서 나온 제안이었다.

바이든은 “미국의 가장 긴 전쟁”을 끝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 군사력을 이용해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애쓰는 시대는 끝나지 않았다. 전쟁이 또 일어날 위험도 사라지지 않았다.

바이든은 아프가니스탄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속조차 하지 않았다.

바이든은 아프가니스탄을 계속 계엄 상태에 두려고 이웃국인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으로 병력을 재배치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보안군 전원의 봉급을 계속 대고 있다.

그리고 바이든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국방군과 보안군을 계속 지원할 것이며, 우리의 동맹들과 함께 약 30만 명의 인력에 장비와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원”이란 보통, 주둔군 일부를 “훈련관”이나 “고문”으로 계속 주둔시키는 것을 뜻한다.

물론 이런 조처는 무력과 폭력으로 전 세계에 미국의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시도가 중대한 좌절에 부딪혔다는 것을 보여 준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며 내세운 명분은 오사마 빈라덴 처단과 알카에다 소탕이었다.

그러나 실제 목적은 미국 패권을 특히 아시아와 중동 인근에서 재확인시키는 것이었다.

이것이 2001년에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2021년이 된 지금, 탈레반 반군은 의기양양하게 “우리가 이겼고 미국이 패배했다”고 외친다. 반면, 바이든은 암묵적으로 패배를 인정했다.

거의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죽음과 고통으로 내몰고 총 80만 명의 군인을 파견했지만 미국은 그곳을 통제하지 못했다.

바이든은 이렇게 말했다. “철군하기에 이상적인 조건을 조성하려고 주둔을 연장하거나 확대하며 ‘이번에는 다르겠지’ 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도 거의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바이든은 이라크에서도 철군을 계획하고 있는



사진 출처: 미 국방부

미국은 여전히 세계적 패권국이지만 여러 난관에 부딪혀 있다. 2011년 당시 부통령으로서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을 방문한 바이든

것으로 보인다

4월 초 바이든과 이라크 정부는 이라크에서 미군 “전투 부대”를 모두 철수하기로 합의했다.

일정

이라크에서도 일부 군인들은 “훈련과 고문 구실”로 이라크에 남을 것이며, 이들의 철수 일정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게 미국의 뜻대로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미국이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을 공습해서 이란 총사령관 거셈 솔레이마니를 살해하자 이라크 의회는 미군 철수를 요구했다.

[이라크 내] 미군 기지는 간헐적으로 로켓 공격을 받는데, 이는 친이란 무장 단체들의 소행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이 실제로 이라크에서 철수한다면 미국의 숙적 이란은 이라크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대부분 이란에게 지원받는 무장 단체들이 모여 있는 인민동원군(PMF)은 사실상 이라크 군대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이란은 이라크 의회에서 두 번째로 큰 세력인 파테 연합의 정치인들을 후원한다.

또, 이라크는 이제 이란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이다. 이란은 이라크 전력 공급을 좌지우지할 만큼 많은 천연가스를 이라크로 수출한다.

이는 전쟁을 야기하는 자본주의의 근본적 특징, 즉 제국주의의 동학을 보여 준다.

국가들은 시장, 자원, 영토 지배권을 놓고 서로 경쟁한다. 자국 경제에 근거지를 둔 기업들과 다국적기업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이윤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이윤 추구 활동은 끊임없이

성장한다. 그래서 국가들은 끊임없이 세계를 분할했다가 또다시 분할하려고 경쟁한다.

이 모든 것은 군사력으로 뒷받침된다. 그래서 한 국가의 성장이 다른 국가의 이익을 위협하게 되면 그것은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란은 미국의 약화를 이용해 이라크 정치·경제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다.

또, 시리아 독재자 바샤르 알 아사드를 편들며 시리아 내전에 참전해, 시리아로도 영향력을 뻗치고 있다.

이제 시리아 국경 너머의 이스라엘은 시리아에 있는 이란군을 꾸준히 폭격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그곳의 이란군을 위협으로 여긴다.

이란은 미국의 동맹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위험하고 치열한 전면 대결을 벌이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역내의 지배적인 국가가 되는 데에 나뉘는 이해관계가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항상 미국과의 관계에서 하위 파트너 위치에 매여 있었다. 하지만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지난 10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는 더 자유롭게 군사 대국으로서 나뉘는 이익을 추구했다

이것의 끔찍한 사례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에게 지원받는 예멘 후티 반군을 상대로 예멘에서 장기화된 전쟁을 벌였다.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을 이용해 이란을 무력으로 견제하기를 바랐다.

제재

트럼프는 이란에 가혹한 경제 제재를 가하고 여러 차례 전쟁을 위협했다. 동시에 트럼프는 이란에 맞서고 이란을 고립시키려고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사이의 긴밀한 협력을 촉진했다.

바이든은 사태가 통제를 더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한다. 바이든은 2015년 이란과 맺은 핵협정으로 돌아가 제재를 끝내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미국의 지배력을 확고히 하는 조건하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

바이든은 동맹국들을 결속시켜서 이들에 기대어 이란을 위협한다는 트럼프의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주 바이든은 아랍에미리트(UAE)에 첨단 전투기와 드론을 팔기로 한 트럼프의 결정을 승인했다.

이런 것들은 원래 이스라엘에게만 팔던 것이었다. 하지만 트럼프가 주선한 이스라엘과 UAE의 협정으로 이런 일이 가능해졌다.

이미 이스라엘은 기습적으로 이란 선박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고, 이란 핵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배후에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에 천문학적인 액수의 군사 지원을 한 것이다. 즉, 중동에서 미국의 대리인 구실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이 그런 구실을 하는 동안 미국은 다른 경쟁국을 상대하는 데에 군사력을 집중할 수 있다.

바이든의 군비 증강 계획은 중국 견제를 미국의 “최우선 과제”로 놓는다.

이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면서 미국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GDP, 즉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시장 가치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몫은 미국보다 크다.

미국과 경쟁하기 위해 중국은 자국의 생산물을 팔고 산업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시장을 찾아 전 세계를, 특히 아프리카 전역을 누볐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의 목적은 중국의 무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

세계에 광범한 교통 인프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이를 뒷받침하려고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들과 해군 기지들로 남중국해를 에워싸 중국의 팽창을 막으려 해 왔다.

남중국해는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항로의 하나로, 중국과 나머지 세계를 이어 주는 주요 길목이다.

미국은 중국이 완전한 군사적 통제력을 갖는 것을 막으려 한다. 하지만 몇 년 동안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해군력을 증강해 왔다.

기지

이것의 일환으로 중국은 해군 기지용 인공섬을 만들기도 한다. 인공섬은 그 주변으로 영해권을 주장하는 데에도 이용된다.

현재 중국은 대만과 더 가까운 곳으로 군사력을 이동시키고 있다. 중국은 대만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데, 미국은 대만을 독립국인 것처럼 지원하고 있다.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면 남중국해에 대한 지배력은 훨씬 커지겠지만, 이는 미국과의 충돌로 나아갈 수 있다.

동시에 미국은 우크라이나 동부를 누가 지배하느냐를 둘러싸고 러시아로부터 비슷한 도전을 받고 있다.

러시아는 여전히 동유럽의 주요 강대국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작은 국가들을 자국 영향력 아래에 묶어 두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진출을 저지할 “완충 지대”도 두고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과, 미국 주도 군사 동맹인 나토(NATO)에 가입하려 하자 러시아는 위협을 느꼈다.

반정부 운동을 통해 들어선 우크라이나 우파 정부가 러시아 영향권에서 이탈해 서방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자 2014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침공했다.

또, 서방에 편입되려는 움직임에 반발해 독립을 원하는 우크라이나 동부 세력을 지원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경에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우크라이나 정치인들은 러시아의 침공을 우려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또한 미국에 대한 군사적 도전이다. 바이든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변함없이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례는 단지 미국의 패권이 약화된다고 해서 전쟁 위험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

오히려 실제 새로운 지역적·세계적 경쟁은 중동, 동유럽, 남중국해 등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폭력에 기름을 붓고 있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275호 / 번역 김지혜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신자유주의 하에서도 여전한 국가와 자본의 유착

[편집자 주] 최근 영국에서 집권 보수당을 둘러싼 부패 스캔들이 불거졌다.

영국의 핀테크 업체인 그린실 캐피탈이 3월 파산 신청을 했다. 그린실 캐피탈은 지난해 기업가치가 40억 달러(약 4.5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받았을 정도로 그 파장이 엄청나다. 소프트뱅크, 크레딧 스위스, UBS, 씨티그룹 등 대형 투자자들의 자금회수율은 30퍼센트도 안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린실 캐피탈은 수익성 악화를 만회하려고 부실채권을 모아 펀드를 만들고 투자자를 유치했는데, 이 과정에서 지급보증 필요했고 보수당 소속 전 총리였던 데이비드 캐머런을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이 금융감독 당국과 유럽 내 민간 금융사들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캐머런은 수천만 파운드에 이르는 그린실 캐피탈의 스톡옵션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캐머런은 현 보수당 정부에 로비를 해 그린실 캐피탈이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HS)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그린실 캐피탈은 장차 NHS 재정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었다.

이 사건은 부패 문제가 자본주의 자체와 떼어낼 수 없고 이 문제에서는 선진국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이 부패 스캔들을 통해 드러난 고위 국가 관료, 정치인, 금융권 사이에 얽힌 그물망을 살펴본다.

최근 영국 보수당을 둘러싼 부패 추문에서 서로 원수가 된 총리 보리스 존슨과 그의 전 보좌관 도미니크 커밍스의 한판 대결은 재미있기는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사안은 아니다. 두 사람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도덕하고 불쾌한 인간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전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이 렉스 그린실과 그의 금융 회사를 위해 정부 고위층에 총력 로비를 벌인 것도 가장 흥미로운 사안은 못 된다. [노동당 원로 정치인인] 데니스 스키너는 이미 오래전 캐머런을 “뭔가 구린 데이비드”라고 부르며 그의 본모습을 꿰뚫어 보았다. 캐머런은 [1994~2007년 노동당 정부 총리를 지낸] 토니 블레어만큼이나 탐욕스러운 자이지만 더 어설픈다.

이번 추문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그린실이 서식하던 정치·금융권의 지하 세계다. 그린실이 정부에서 자리를 얻게 된 것은 제러미 헤이우드 덕분이었다. 헤이우드는 2018년에 사망할 때까지 내각 사무처 장관으로 공무원 조직의 수장을 지낸 자다. 2011년에 헤이우드는 그린실에게 내각 사무처에 자리를 마련해 줬다. 둘은 헤이우드가 2003~2007년에 미국 월가의 대형 투자 은행 모건스탠리로 잠시 파견갔을 때 만난 사이였다. 그린실도 자기 회사인 그린실 캐피탈을 차리기 전에 그곳에서 일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헤이우드가 정부로 복귀한 뒤 그린실 외에도 다른 월가의 친구들을 도왔다는 사실을 폭로

했다.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사이먼 로비다. 로비는 헤이우드가 모건스탠리에서 일할 때 그의 상사였고, 지금은 자기 회사를 갖고 있다. 2016년 일본의 대기업 소프트뱅크가 반도체 설계업체 암홀딩스를 인수할 때 로비는 소프트뱅크의 고문에 참여했는데 헤이우드가 나서서 그를 도왔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 “정부 관료”의 말을 인용한다. “헤이우드는 그 인수협상에 지나치게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다 … 정부 내에서는 헤이우드가 그러는 것에 아연해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 헤이우드의 한 동료는 헤이우드가 … 금융권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의 ‘광팬’이 됐다고 회상했다. ‘어떤 시점이 되자 그는 민간 부문의 광신도가 됐다. 민간 부문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어떤 순진함이 있었다.’”

사고방식

그러나 이것은 헤이우드만의 기벽이 아니다. [1990년대 중후반 ~ 2000년대] 신노동당 정부와 캐머런의 보수당 정부 시기에 신자유주의가 전성기를 누리는 동안, 민간 자본이 정부보다 더 유능하다는 식의 사고는 아주 단단히 고착화됐다.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보수당 정부는 팬데믹 기간에 보수당과 연줄이 있는 무능한 기업들에게 사람 목숨이 걸린 개인보호장비 공급과 검사·추적 프로그램을 위탁하느라 막대한 공적 자금을 날려 먹었다.

금융권과 정부 사이의 회전문 인사로 득을 본 고위 공무원들은 헤이우드만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이 아니다. 특히 매우 뻔뻔한 사례가 빌 크로더스다. 2주 전에 폭로된 바에 따르면 크로더스는 그린실 캐피탈의 비상근 고문으로 채용된 후에도 계속해서 정부의 물자 조달 최고 책임자를 지냈다.

크로더스는 캐머런이 주도한 그린실의 NHS 침투 작전에서 중요한 구실을 했다. 그린실 캐피탈은 공급망 금융을 전문으로 했다. 이것은 공급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고 발행하는 대금 청구서를 조기에, 그러나 그 대금보다 약간 싸게 사들이는 사업이다. 상품이나 서비스 수령자가 그 대금을 정산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청구서는 이윤을 내는 금융 자산이 될 수 있다.

그린실은 “엔드”를 통해 NHS에 발을 들였다. “엔드”는 NHS 피고용인이 임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서비스다. 그린실은 이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 줬지만 〈파이낸셜 타임스〉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2019년 12월 한 NHS 트러스트에서 열린,

‘NHS에 가치를 더하다’라는 제목의 발표회는 이 무상 제공이 발판에 불과하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그린실은 이를 통해 그린실의 더 복잡하고 수익성 있는 금융 상품을 NHS에 제공하려 했다. ‘임금 조기 지급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행히도 또 다른 “더 복잡하고 수익성 있는 금융 상품”이 그린실을 파산으로 내몰았다. 그린실은 영국 철강 산업의 상당한 부분을 사들인 철강업자 산지브 굽타에게 많은 돈을 빌려 줬다. 그러나 그 빛의 담보물이었던 청구서들은 일부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이 드러났고 일부는 굽타가 고용하거나 굽타와 연줄이 있는 사람들이 정산할 청구서임이 드러났다.

〈선데이 타임스〉는 말린 베이커 보그라고 하는 트럼프 지지 성향 로비스트가 굽타에게 고용돼 있는 동안 존슨의 보수당 대표 경선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굽타는 노동당과 스코틀랜드 국민당 정치인들과도 관계를 쌓아 왔다.

그린실과 굽타가 금융권에 쳐 놓은 부패의 그물이 터지면서 둘은 심중팔구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덕분에 NHS는 그 그물에서 빠져나오게 됐다. 그러나 NHS가 가장 절실한 이 시기에 NHS의 막대한 자원을 보고 그걸 이용해 먹으려는 자들이 더 많이 꼬일 것이다. 그리고 더 많은 헤이우드 같은 자들이 그들에게 문을 열어 줄 것이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752호 / 번역 이원웅

미얀마 항쟁

평화는 쉽게 오지 않을 것, 더 많은 투쟁 대비해야

유리 프라스타

미얀마에서 또다시 학살이 벌어질 것인가? 아니면 지난주 아세안 정상회담을 계기로 비교적 안정된 국면으로 접어들 것인가?

서로 모순되는 듯 보이는 두 사태 전개에, 수많은 항쟁 참가자들이 이런 물음을 던지고 있다.

4월 23일까지 민주주의 항쟁 참가자 약 800명이 목숨을 잃고 수천 명이 구금됐다.

현재 군사 정권 내 일부는 1988년과 2007년에 그랬던 것처럼 공세를 퍼서 민주주의 운동을 분쇄하고 싶어 한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문당했다.(관련 기사 본지 357호 ‘미얀마와 민주주의 투쟁’)

최근, 군사정부 최고위 사령관들이 수도 네피도에서 내린 명령서가 공개됐다.

이 명령서는 민주주의 시위대를 계속 공격하라고 분명하게 밝힌다. “조



4월 24일 아세안 정상회의 이들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안정’을 되찾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

우시 반드시 섬멸할 것.

“폭도가 평화 시위에서 무력 충돌로 수위를 높였다.”

명령서는 장교들이 지시를 “엄격히” 따라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4월 24일 아세안 정상회의에

모인 동남아시아 각국 수반들은 계속되는 살인 진압이 일으킬 파장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중국과 미얀마 대표도 참가한 이번 정상회의는 미얀마 군사 정권을 규탄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지만, 폭

력 사태가 중단돼야 한다는 데서는 합의의를 이뤘다.

우려

몇몇 정상들은 정치수 석방을 요구했다. 이는 미얀마의 혼란이 주변국인 인도·중국·타일로 번질 수 있다는 역내 지배자들의 우려를 주로 반영한 것이다. 그런 불안정은 투자를 끌어들이는 데에 해가 될 수 있다.

이미 많은 다국적 기업들은 미얀마 내 천연가스전 운영을 걱정하고 있다. 노동자 파업과 시위, 그에 대응하는 군부의 총격 때문이다. 중국은 미얀마 내 중국 소유 공장들을 겨냥한 방화·가빈번한 것에 우려하고 있다.

이런 소요는 민주주의 운동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4월 초, 중국 국경 인근에서 카친족 분리주의 반군이 미얀마 군인 약 100명을 죽였다. 다른 소수민족 집단들도 미얀마 곳곳에서 격렬히 전투를

벌이고 있다.

미얀마 민주주의 운동 내 일부는 아세안 정상회의의 소식에 힘을 얻었고, 다음 수순으로 “인도적 개입” 같은 것의 전 단계로서 아세안 국가들의 특사가 파견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지역 강대국들에 기대를 거는 것은 중대한 실수일 것이다.

이들은 미얀마 정권의 성격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오직 “안정”에만 골몰해 있다. 설령 그 “안정”을 위해 민주주의를 희생해야 한다 해도 말이다.

한편, 많은 대도시의 노동자 지구들에는 여전히 바리케이드가 서 있고, 사냥총과 초보적인 무기로 무장한 사람들이 바리케이드를 지키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바랄 테지만, 역사의 교훈은 더 많은 투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 준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752호 / 번역 강미영

이상직 구속은 당연한 일 해고 노동자 복직시키고 이스타항공 국유화하라

이정원

이스타항공 창업주이자 현직 국회의원 이상직이 횡령·배임 등 혐의로 4월 28일 구속됐다. 이상직은 회삿돈 58억 45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직 일가로 치면 빼돌린 돈이 500억 원대에 이른다.

이스타항공 노동자들과 노동 단체들은 이상직 영장 실질심사가 열린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을 촉구했다. 전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미 지난해 이스타항공 노동자 대량 해고를 계기로 이상직 처벌 목소리가 커져 온 상황임을 감안하면 뒤늦은 검찰 수사와 구속이 아닐 수 없다.

이상직과 그의 일가는 그동안 회삿돈을 이용해 부와 권력을 누려 왔다. 횡령한 돈을 정치 자금과 딸의 포르쉐

자동차 리스 비용, 고급 오피스텔 임차료 등으로 사용했다는 혐의가 제기돼 큰 공분을 자아낸 바 있다. 이상직은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장을 맡고 국회의원까지 됐다.

무엇보다 이상직은 회삿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면서도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에게는 장기간 임금을 체불하고, 결국 700여 명을 해고하는 짓도 저질렀다. 노동자들과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수천 명의 삶을 망가뜨린 것이다.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가 벌어진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체불 임금 문제도 여전하다.

사태가 이런 지경이 된 데는 정부와 여당의 책임도 상당하다.

고용 위기가 한창일 때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사태가 벌어지는데도 정부는 사실상 묵인했다. 항공사들에 수조원을 퍼부으면서도 노동자들의 일자리 보호는 외면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무급휴직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이상직을 국회의원 후보로 내세웠고, 노동자들이 항의해도 이상직을 비호하기 급급했다. 결국 횡령 등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비난 여론이 커지자, 이상직의 자진 탈당을 용인하며 꼬리 자르기를 했다.

따라서 이상직 구속은 마땅한 일이지만 이것으로 정부나 여당의 책임이 가려질 수는 없다.

법원은 이상직을 제대로 처벌해야 하고, 정부는 이스타항공 해고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스타항공 회생 여부를 불투명한 시장에 내맡겨서는 안 된다. 설사 매각이 다시 추진된다 해도 해고된 노동자들의 고용이 보장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해고된 노동자들을 복직시키고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이스타항공을 국유화해야 한다.



이상직 구속으로 정부·여당의 책임이 끝난 게 아니다

아시아나케이오 해고자 복직 투쟁 아시아나에는 수조 원 지원, 해고자는 경찰 연행

이정원

지난해 5월 해고된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의 복직 투쟁이 1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자 사측은 무급휴직을 강행하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 8명을 해고했다. 당시 사측은 유급휴직을 시행하기로 한 노조와의 합의마저 깼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지만 사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완강하게 버티고 있다.

아시아나케이오 사측은 유급휴직 급여 대부분을 지원해 주는 고용유지지원금도 신청하지 않고 해고를 강행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외에 사측이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 10퍼센트조차 아까워 노동자들을 길바닥으로 내몬 것이다.

원청인 아시아나항공의 책임도 크다. 아시아나항공은 기내 청소, 수하물 운반 등 수많은 업무를 하청회사에 맡겨 저임금과 열악한 조건으로 노동자들을 부려 먹다가, 위기가 오자 노동자

들에게 무급휴직, 해고와 같은 고통을 떠넘겼다. 정부 지원금 수조 원을 받으면서도 말이다.

게다가 아시아나케이오의 실소유주는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었던 박삼구다. 현재 박삼구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은 아시아나케이오 지분을 100퍼센트 소유하고 때때로 수억 원의 배당금을 챙겨 왔다. 그런데도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발뺌만 하고 있다.

퇴직 시한

사측이 이렇게 복직을 외면하는 동안 일부 해고자들은 정년퇴직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퇴직을 앞둔 해고 노동자 2명은 4월 13일부터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그러나 정부는 사태 해결에 전혀 나서지 않았다. 해고 노동자들은 노동위원회의 복직 명령을 사측이 이행하도록 정부가 조처해 달라고 거듭 요구했지만, 정부는 외면했다.

심지어 최근에는 두 차례나 경찰이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농성자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4월 26일에는 서울고용노동청의 경찰 투입 요청으로 14일 동안 단식한 노동자들까지 연행해 갔다. 지난 13일에도 경찰 400명을 동원해 노동자들을 연행한 바 있다. 물론 이런 신속한 연행에는 새로 당선한 서울시장 오세훈도 한몫했다.

퇴거 요청 몇 시간 만에 일사천리로 노동자들을 연행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회장에 대한 수사는 수개월 동안 뜸을 들이다 이제서야 검찰이 소환을 하는 단계다.

정부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에는 8000억 원을 쏟아부으면서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은 강제하지도 않는다. 이 합병으로 오너 일가들은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반면, 양측의 노동자들은 앞으로 고용 불안에 직면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서울고용노동청과 경찰의 행태는 이 정부가 '노동 존중' 운운해 온 것이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보여 주고 있다.



해고 사태는 수수방관, 회장 비리 수사는 지지부진, 노동자는 신속 연행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소속 (☐ 직장 ☐ 노조 ☐ 대학교 ☐ 종교동교회 ☐ 기타)

회비약정액 ☐ 2만 원 ☐ 3만 원 ☐ 4만 원 ☐ 5만 원 ☐ 기타 () 원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 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4909-2026, mail@workerssolidarity.org

wspaper.org

- ★ 미·중 갈등 속 한국의 “초월 외교”는 가능할까?
- ★ ‘생명주일 담화’ 논란 염수정 추기경의 동성애와 가족에 대한 편협한 인식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구독기간 ☐ 1년 ☐ 2년 ☐ 2년 이상 () 년

입금 계좌 (예금주 (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가능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6491-2792, ws@wspaper.org

택배 차량 아파트 지상 출입 금지 논란

택배사가 조건 악화 방지 대책 내놔야 한다

신정환

최근 서울 강동구의 한 대형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금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아파트단지 내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 금지 논란은 이번만이 아니다. 2019년 다산 신도시 '택배 대란'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벌어져 왔다.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이 금지되면, 택배 노동자들은 아파트단지 입구에서 손수레를 이용해 배달해야 하므로 기존보다 노동시간이 3배가량 늘어난다. 이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의 그림자를 짊어지고 사는 택배 노동자들에게 커다란 압박으로 다가 온다. 손수레 배송으로 비나 눈이 올 때 물품이 손상되면 노동자들이 변상까지 떠맡아야 한다.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려면 기존의 택배 차량을 저상 차량으로 개조해야 한다. 택배 기사들은 특수고용 노동자 처지라 수백만 원에 이르는 개조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저상 차량은 보통의 성인 남성 키보다 낮아(1.27미터), 짐칸에서 택배 상자를 옮기려면 허리를 숙이거나 기어서 작업을 해야 해, 노동자들의 신체에 심각한 무리와 통증이 따른다. 또한 차량의 높이가 낮아져 실을 수 있는 택배 상자 수가 줄어들어, 노동자들은 실지 못한 택배를 가져 오기 위해 먼 거리의 택배터미널을 추가로 다녀와야 해 노



특수 누린 택배사들, 아파트 택배 논란에는 책임 회피 택배사들은 지하주차장 출입이 가능한 차량 개조 비용도 노동자에게 떠넘기려 한다. 저상 차량은 신체에 무리를 주고 노동시간을 늘리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없다

동시간이 더 늘어난다.

이렇듯 아파트 지상 출입 금지는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및 강도 증가, 비용 증가를 수반해 노동자들의 고통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 신규 아파트들이 지상에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공원형으로 설계되고 있어, 이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작 택배사들은 문제 해결의 책임을 택배 기사들에게 떠넘긴 채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심지어 택배사들은 해당 아파트에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도, 문제가 악화될 때까지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강동구 아파트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CJ대한통운의 해당 아파트 배송 담당팀과 지상 출입을 금지하기로 하고 유예기간까지 협의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택배 노동자들과 관련 내용을 상

의하거나 필요한 보완책을 제공한 것이 전혀 없다. 그대 놓고 CJ대한통운은 문제가 불거지자 택배 기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택배에 국한되지 않는다. 음식 배달 노동자들이나 퀵서비스 노동자들도 이륜차를 아파트단지 앞에 두고 도보로 이동해야 한다. 이륜차의 특성상 지하주차장은 미끄러워 안전 사고와 부상의 위험이 증가한다. 심

지어 일부 아파트나 건물의 경우, 배달 노동자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여 헬멧과 작업복을 벗고 출입하고 화물용 승강기를 이용하라고 강요하기도 한다. 그런데도 배달업 회사들은 택배사들과 마찬가지로 뒤흔진 채, 노동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 특수를 누리며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는 택배사와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과실만 따 먹고 노동자들의 배달 조건 악화에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다.

정부도 코로나 팬데믹 시기 배달 노동자들이 필수 노동자라며 말로만 떠들 뿐, 노동자성 인정과 산재·고용보험 전면 적용 등 다수가 특수고용 노동자였던 배달 노동자들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은 미적거리고 있다.

이에 택배 및 배달, 퀵서비스 노동자들은 택배사와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책임지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라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노동자들은 해당 아파트 등의 배달 수수료 인상 등 해결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정부에도 수수방관 하지 말고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소속 해당 노동자들은 4월 26일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5월 1일에 노동절을 맞아 청와대 인근에서 공동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국택배노조는 4월 29일부터 CJ대한통운 앞에서 농성에 들어갈 계획이다.

자가격리자 집도 대면 배달

코로나19 1년 넘게 집배원 안전 대책 부실

신정환

코로나 팬데믹이 벌써 1년이 지났다. 여러 필수 분야 노동자들이 그러하듯, 우체국 노동자들도 공공의 편익을 위해 감염 우려에도 헌신적으로 우편과 금융 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대면 서비스를 해야 하는 우체국 노동자들에게 코로나 방역 대책은 꼭 필요하다. 특히 곳곳을 돌아 다니며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접촉해야 하는 집배원들의 경우, 감염을 최소화할 대책 마련이 더욱 절실하다.

지난해 1월부터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당시 전국집배노조)는 정부에 집배원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책 마련을 줄곧 요구해 왔다. 대면 배달 최소화, 안전을 위한 보호 장비 지급, 격리자 정보 제공 및 배달 방법 안내, 위험한 구역으로 판단될 경우 배달을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 적극 고려 등.

그러나 우편서비스 책임자인 정부의 방역 대책은 여전히 허술해 노동자들을 위험에 빠트릴 우려가 상당하다.



필수 노동자 보호도 말뿐인 문재인 정부

사실상 노동자 개인이 알아서 조심하라며 안전 조치를 떠넘기고 있다. 지난해 팬데믹 초기 집배원들은 마스크 지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마스크 대란에도 마스크를 한동안 사비로 구입하거나 며칠씩 써야 했다.

집배원들은 무엇보다 수취인의 서명을 직접 받아야 하는 등기우편물의 경우, 비대면 배달을 확대하는 방안을 요구해 왔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등기 대면 배달은 최소화하고, 격리자에게 대면 배달 시 집배원에게 정보

를 제공하고 안전한 배달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격리자 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있고 우체국택배를 제외하곤 등기우편물 비대면 전환 관련 일관된 방침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 성북구보건소는 자가격리자들에게 등기우편물 150여 통을 발송하면서, 담당 구역 집배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래서 성북우체국 집배원들은 이 사

실도 모른 채 자가격리자들에게 직접 서명을 받았다. 그중 한 집배원인 신순용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성북우체국지부장은 수취인으로부터 자가격리자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는, 깜짝 놀라 해당 우체국과 동료 집배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그래서 자가격리자와 접촉한 성북우체국 집배원 17명은 4월 26일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했다(다행히 전원 음성으로 나왔다).

신순용 지부장은 아무런 정보 제공도 하지 않은 채 노동자들을(확진자일 수 있는) 격리자와 접촉 배달로 내몬 정부를 규탄했다.

“보건소에서 자가격리자에게 음식 배달을 직접 합니다. 문 앞에 음식을 놓고 가고 연락하는 것으로 압니다. 우편물 배달도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유행이 1년이 넘었는데도 제대로 된 대책이 없습니다. 집배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우편물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슈퍼 전파자가 될 것이 가장 우려됩니다.”

우정사업본부도 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긴 마찬가지다. 최소

목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공동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는 정부 부처에 대책 건의를 했다는 말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자들은 우정사업본부가 우편물 수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기도 한다. 등기우편물이 준등기에 비해 요금이 비싸기 때문이다.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성북우체국지부는 성북우체국 물류과장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성북구와 보건소에 항의 민원을 넣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마스크 지급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별한 바 있다. 간접고용(우체국시설관리단 소속) 노동자들인 우체국 금융경비, 미화 노동자들에게 직접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경인지역본부 등이 항의하자 직접 지급하기 시작했다.

집배원들의 배달 업무에 대해 제대로 된 방역 대책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에서 보듯, 문재인 정부의 필수 노동자를 보호 조치는 말의 성찬일 뿐 실질적인 것인 별로 없다.



위안부 배상 판결 패소의 의미

한국 지배계급도 피해자들을 외면한다

김승주

4월 21일 법원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뒤집었다.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여 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소송 각하)한 것이다. (본지 365호 관련 기사: '법원이 문제인의 배신을 정당화하다')

이는 올해 1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피해자 13명이 승소한 재판 결과와는 다른 것이다. 두 소송은 완전히 똑같은 내용이었는데도 말이다.

1월의 배상 판결 직후 문제인은 "곤혹스럽다," "바람직하지 못하다"(신년 기자회견)며 법원을 대놓고 압박했다. 1월 배상 판결이 박근혜-아베의 기만적인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와 정면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 합의는 일본 정부의 '위로금' 10억 엔 지급으로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종결하자고 명시했었다.

결국 문제인은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 정부는 한일위안부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대통령의 입장이 이러하니 4월 판결 직후 외교부는 회피하듯이 모호하게 말했다. "정부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이어 나갈 것이다.]"



이번 재판의 원고였던 이용수 할머니. 한일위안부합의의 유지라는 문제인 정부의 배신은 피해자들을 내친 법원의 핵심 근거였다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 윤미향 의원도 정부의 배신을 호도하며 이렇게 말했다. "문제인 정부는 피해자 중심 접근을 벗어난 합의는 무효라고 이미 발표했다." 이것은 단순히 거짓말이다. 더구나 윤미향 의원은 고(故) 김복동 할머니의 소송을 전 정의연 대표 자

격으로 승계해 이번 소송의 원고이기도 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 박정현도 "사법부의 반인권의식, 반역사의식, 반시민의식"을 탓하며 툴툴거렸지만 문제인 정부의 배신을 모른 채 법원만 비판하는 것은 기만적이다. 사실 법원

은 문제인 정부의 배신을 정당화해 준 것이다.

판결이 대변하는 이해관계

이번 위안부 패소 판결은 명백히 한국 지배계급의 의중을 반영한 정치적인 판결이다. 형식적인 삼권분립 구조

를 넘어 행정부와 사법부가 공유하는 더 근본적인 계급 이익이 있다.

법원은 배상 판결을 석 달 만에 뒤집은 판결문에서 "전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에 미칠 유불리를 냉정하게 고려"해 결정한다고 했다. 법리는 그다음 문제였다.

법원이 고려한 '국익'은 한·일 양국 지배계급(국가기관 관리자들과 기업인들)이 맺고 있는 안보적·경제적 유대와 그 이해관계다.

물론 해방 이후 한·일 관계는 언제나 과거사 문제라는 폭탄을 안고 있었다. 역대 한국 정부들은 모두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하지만 결론은 항상 한미일 동맹이 주는 안보적·경제적 이익 쪽으로 기울었다. 일본 제국 하에서 고통받았던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의 외면으로 두 번, 세 번 짓밟혔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라는 판결 때문에 일본과의 합의를 모색했던 박근혜 정부가 반동적인 합의를 한 것도 그 사례다.

그러나 문제인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취임 전에는 피해자가 바라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약속했었다. 하지만 집권 후에는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뒤집었다. 급기야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를 인정한다고 공표해, 고령의 위안부 피해자들의 뒤통수를 쳤다.

국제기구·국제법은 팬찮은 대안이 못 된다

이번 판결 이후 국제사법재판소에 위안부 문제를 회부하자는 일각의 목소리가 커졌다. 원고의 한 분인 이용수 할머니도 그러한 입장이다.

1990년대 초 일본 현지에서부터 시작된 지난한 법정 투쟁은 한국 법원에 서도 20년 동안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다.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국제기구에 기대를 걸어 보는 피해자의 심정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양차 세계대전과 그 전후 처리 과정을 비롯해 제국주의의 역사적 경험을 볼 때, 국제법과 국제기구는 세계 질서에서 힘을 발휘하는 강대국에 유리한 도구이지, 피억압자들이 기대를 걸어 볼 만한 수단이 되지 못했다. 국제법은 인권, 평화, 평등 같은 추상적인 이념들이 넘쳐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체로 별 소용이 없다.

이번 위안부 배상 재판에서의 법리적 쟁점은 국제법상 국가면제 적용 여부였다. 국가면제에 따라, 타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국제법에는 상호주의 및 강행규범(국제 사회의 선량한 공통가치를 보호

하기 위한 최상위규범) 원칙도 있다. 이는 '국가면제' 논리와 모순된다. 그러나 모순 속에서 결국 더 중시돼 온 것은 제국주의 세계질서이다.

가령 2004년 이탈리아 대법원은 제2차세계대전 시기 자국민을 대상으로 강제노역을 저지른 독일군에 대해 '상호주의를 위반한 불법 행위에는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배상 판결을 내렸다. 독일 정부 소유 재산인 문화교류센터를 압류해 강제집행으로까지 나아갔다.

그러나 이 판결은 얼마 가지 못했다. 독일 정부가 이탈리아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해 결국 2012년 이탈리아가 패소했기 때문이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무력 분쟁"(전쟁 행위)은 불법 행위이기 이전에 고도의 주권 행위이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단지 독일의 손을 들어 준 게 아니라 제국주의 논리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결국 이후에 이탈리아 하급심에서 비슷한 배상 소송들은 줄줄이 기각됐다.

1990년대 정대협과 위안부 피해자들의 노력으로 유엔 인권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ILO)가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보고서들을 채택하는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추상적이고 상징적 의미 이상으로 강제력은 없었다. 일본 자민당 정부와 우익의 역사 왜곡과 망언은 계속됐다.

반제국주의

일각에서는 유엔 등 국제기구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미국이 중재에 나서 줄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전략상 한국보다 일본을 훨씬 중시하는 제국주의 강대국으로서 자기 국익을 앞세웠을 뿐이다.

특히,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관찰시키려는 초저 중에는 경쟁 상대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군사 동맹 강화가 있다. 특히 바이든 정부는 이를 강조하고 있다. 최근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는 대놓고 일본 정부 편을 들고 있다.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면 일본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

가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위안부 운동이 국제법/국제기구에 이 문제를 맡기는 데 힘을 쓰면 운동의 초점이 흐려지고 노력과 시간이 낭비될 것이다. 위안부 문제를 가로막는 주범들에게 해결을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은 현재의 군사대국화 야망을 이루려고 과거 제국의 만행을 옹호하고 은폐하고 있다. 미국은 그런 일본과 동맹을 맺고 기존의 세계 패권을 유지하려고 한다. 미·일은 그 동맹에 한국을 충실한 하위 파트너로 삼고 싶어 한다. 한국의 지배계급은 수십년 간 이런 동맹 질서 안에서 안보적·경제적 이익을 누리 왔다. 비록 지금은 중국을 의식해 한미일 삼각동맹을 노골적으로 찬양하지는 않지만 말이다.

이것이 위안부 문제가 일본 정부와 이른바 '국제사회', 그리고 한국 국가에게도 외면받는 이유다.

이런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안부 문제는 친제국주의적인 한

국 정부에 의해서나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국제 기구에 의해 해결될 수 없다. 반제국주의 정치가 중요한 이유다.

추천 소책자



위안부 배상 판결 외면하는 문제인 정부

위안부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을까

김승주 외 지음, 노동자연대, 128쪽, 4,000원

노동자연대 웹사이트(<https://workersolidarity.org>)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